

① 사전은 학문 축적결과가 드러나는 총화, 장기적인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민속문화대사전》엔 민속학자 김용덕



서른 둘, 교수에 임용된 지 불과 3년째인 젊은 교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에 당연히 있어야 할 민속사전이 없다는 사실에 의아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민속학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1980년대 들어와서 활발해지기 시작해 그가 연구할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축적된 상태였다. 당시 스승들에게 “우리도 이제 민속사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들 역시 공감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돌아온 대답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사전편찬은 방대한 작업이라서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었다.

다행히(?) 민속학자인 한양대학교 김용덕(55·국어국문학) 교수는 당시 ‘사전편찬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불문율을

깨기 위해 도전하고 싶었다.

“일본에 가보니 이미 《일본세시기》《본민속사전》 등 여러 권의 민속학 사전이 나와 있더군요. 중국도 마찬가지구요.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기록한 민속사전 한 권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린(?) 생각에 연구내용이 방대하지 않아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더군요.”

하지만 스승들의 말대로 역시 사전편찬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참고서적을 구하고 방학이 되면 가족의 원망을 뒤로 하고 한 달씩 답사를 다녔다. 전국의 알려지지 않은 설화를 채록하고 지역마다의 독특한 축제와 굿 등 문화재를 사진에 담았다. 사비를 들여 사전작업을 도울 조교를 두었지만 강의를 하고 논문을 준비해야 하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지 않았다.

그나마 당시 고서점을 떠돌던 군지郡誌가 도움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길이 넓어지고 주거가 근대화되면서 고인돌, 서낭당, 초가 등 전통문화가 급격하게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가 너무 사라져 버렸다고 판단한 정부가 뒤늦게 300여 시·군에 전통문화를 기록해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전통문화 가꾸기> <옥주의 얼> 등의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습니다. 나중에 고물상들에 의해서 인사동이나 청계천 고서점으로 흘러들어왔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당시 군지를 모으는 저의 경쟁자가 나타났죠. 국내 다른 민속학자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섭다는 걸 그때 절실하게 느꼈죠.”

그러던 중 가장 큰 고비는 작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찾아왔다. 학내분규 도중 연구실에 그만 불이 난 것이다. 창틀 아래에 분류카드를 꽂아가며 정리해 두었던 자료는 반 이상이 타버리고 말았다.

“원고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필름이 타버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화재 당시 저는 서울 행당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틀림없이 자료를 꺼내기 위해 뛰어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열흘간 치우지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던 김 교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시 한 구절이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염두에 둔 듯한 만해 한용운의 시 〈알 수 없어요〉의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문장을 주문처럼 외우며 김 교수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튼튼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산 올리베티 타자기 네 대를 고물로 만든 《한국민속사전》이 나온 건 1994년이였다. 하지만 막상이 사전에 김 교수의 이름은 없다. 저작권 때문이다.

“출판을 앞두고 혹시 저작권문제가 걱정돼 자주 인용한 책의 저자 50명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공저로 명기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아마 저처럼 민속사전을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사전은 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이 많다는 이유로 공저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제 이름이 빠진 채 있지도 않은 '편찬위원회' 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 1월에 나온 《한국민속문화대사전》(창술)은 《한국민속사전》을 수정·증보해 2,200쪽 상·하권으로 출간한 것이다. 한국의 풍속을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문학·역사학·종교학·윤리학·건축학·체육학·가정학·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필요한 항목을 원전과 함께 밝혀 놓고 있다. 특히 김 교수 개인적으로 뜻깊은 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저작권을 되찾아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단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애초에는 1994년 이후의 자료를 정리해 따로 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속사전》을 그냥 그렇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21세기를 문화전쟁시대라고 하는데 민속사전은 대한민국의 문화전쟁력을 높여줄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다행히 저작권과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출판사에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다시 넘겨주더군요. 사전은 수정과 증보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책임을 지고 생명을 불어넣어줄 저자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김 교수는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은 개정 증보판을 낼 생각이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 후배나 제자들이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 공저자가 100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

다. 그렇게 증보와 개정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브리태니커》 못지않은 사전을 갖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작업하는 '세시풍속사전' (가제)이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네 권으로 제작되는 이 책에 지원되는 금액은 42억 원. 물론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세시풍속사전에 비교한다면 《한국민속문화대사전》은 최소한 2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작업이었던 셈이다.

“학문의 발전은 기초학문의 육성에서 출발합니다. 사전은 학문의 축적 결과가 드러나는 총화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사전의 경우 순전히 개인의 연구비에 의존하였습니다. 최근에 사전편찬에도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연구비 지급의 기준이 보통은 1년이고 길어도 2~3년에 불과합니다. 다년간 작업을 요하는 사전편찬 같은 경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절감했듯 사전편찬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초학문 발전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민**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